

인 도

2003. 9

최윤정

yjchoi@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3,287,590 km²
- 인 구: 10억 5,000만 명(2003. 6월 말)
- 기 후: 열대몬순
- 시 간 대: GMT보다 5시간 30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인도공화국(The Republic of India)
- 수 도: 뉴델리(New Delhi)
- 행정조직: 26개 주, 6개 직할지

□ 정 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대 통 령 : 압둘 카람(A.P.J. Abdul Kalam, 2002년 7월 취임, 임기 5년)
- 의회형태 :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45석, 차기총선 2004년 10월 예정)
- 총 리 :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A. B. Vajpayee, 1999년 10월 취임)
- 주요정당 : 인도인민당(BJP, 집권당, 23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 제1야당), 공산당(CPI-M), 텔루그데삼당(TDP, 연정참가), 자나타달당(JD, 연정참가), 사마지와디당(SSP) 등

□ 사회·문화

- 민 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 언 어: 힌두어외 14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힌두교(82.4%)와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자이나교(0.4%) 등
- 공 휴 일: 공화국의 날(1. 26), 독립기념일(8. 15), 성탄절(12. 25)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 협정체결: 무역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5년), 항공협정(1992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 취항도시: 항공기 서울-뉴델리(주 1회), 서울-뭄바이(주 1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 위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1~3월
인 구	백만 명	979	996	1,012	1,030	1,046	1,050
경상 GDP	억 달러	4,180	4,516	4,773	4,855	5,076	
1인당 경상GDP	달 러	432	459	478	473	485	
실질 GDP증가율	%	6.4	7.2	6.1	5.4	4.4	4.9
소비자물가상승률 ¹⁾	%	13.1	3.4	3.8	3.7	4.2	3.8
재정적자(GDP비중)	%	-4.8	-4.2	-5.5	-5.1	-5.9	
경 상 수 지	억 달러	-40	-47	-36	6	37	10
무 역 수 지	억 달러	-85	-116	-113	-60	-121	-22
수 출	억 달러	343	383	442	434	507	131
수 입	억 달러	428	499	555	494	628	153
외환보유고 ²⁾	억 달러	316	380	411	481	704	754
환 율(연평균)	루피/달러	41.3	43.1	44.9	48.3	48.0	47.5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

1) 공업노동자 연평균 물가(1982=100), 2) 금과 SDR 포함, 기간 말 기준

자료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EIU, *Country Report, India*, August 2003.

2. 향후 경제전망

	2003/04		2004/05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실질 GDP성장률(%)	6.0	5.6	6.6	5.7
소비자물가상승률(%)	4.6	4.8	5.4	5.8
경상수지(십억 달러)	3.0 (GDP대비 0.5%)	GDP대비 0.2%	5.2 (GDP대비 0.8%)	GDP대비 -0.5%?
환율(연평균, 루피/달러)	46.70	46.95	46.24	47.82

자료: EIU, *Country Report Update ; India*, August 2003.

Global Insight, *Asia and Oceania Monthly Outlook*, August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지역별·국별 수출입(2001/2002년)

(단위 : 천만 루피)

순 위	수 출		수 입	
	지역 및 국가	금 액	지역 및 국가	금 액
1	<OECD>	103,120	<OECD>	98,489
	미 국	40,602	미 국	15,021
	영 국	10,306	벨기에	13,177
	독 일	8,529	영 국	12,224
	일 본	7,204	일 본	10,237
	벨기에	6,632	독 일	9,672
2	<아시아>	46,803	<아시아>	37,414
3	<OPEC>	25,016	<OPEC>	14,215
	사우디아라비아	3,941	사우디아라비아	2,213
4	<아프리카>	7,796	<아프리카>	4,624
5	<동유럽>	4,859	<동유럽>	3,320
	러시아	3,807	러시아	2,554

자료 :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2002/2003*. 2003.

나. 품목별 수출입(2001/2002년)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섬유 및 섬유제품	8,270	석유 및 석유제품	14,000
2	보석 및 귀금속	7,306	보석 및 준보석	4,623
3	기계류	6,939	화학제품	5,376
4	화학제품	4,684	비전자기계류	3,164
5	무기연료 및 운활유	2,183	운송장비	1,149

자료 :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2002/03*. 2003.

다.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루피)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1	누적합계
승인기준	1,419	3,207	3,615	5,489	3,081	2,837	3,704	2,687	987	28,354
실행기준	329	682	1,039	1,643	1,334	1,687	1,934	1,927	1,825	12,680
실행율	23.2	21.3	28.7	29.9	43.3	56.3	52.2	72.2	185	44.7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SIA, *SIA Newsletter*, December 2002.

□ 업종별 FDI 현황(승인기준 : 1991.8~2002.11.30 누계)

(단위: 백만 루피)

	건 수	누 계 액	비 중
연료(전력, 석유정제 등)	919	774,447	27.32
통신	857	562,774	19.85
전기·전자·소프트웨어	4,996	279,158	9.85
운송산업	1,552	210,008	7.41
서비스산업(금융 등)	1,042	184,162	6.50
금속산업(철, 비철 등)	722	154,560	5.45
화학(비료 제외)	1,787	129,141	4.56
식품가공산업	885	94,761	3.34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SIA, *SIA Newsletter*, December 2002.

□ 국별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1-1999	2000	2001	2002	2003. 5	합계
미 국	461,845	41,950	49,215	20,511	4,047	577,568
모리셔스	221,983	72,340	28,925	18,466	2,848	344,562
영 국	159,767	4,112	49,942	18,044	817	232,682
일 본	91,077	8,275	7,353	7,408	748	114,861
한 국	96,901	411	668	290	470	98,740
독 일	79,033	5,938	4,139	2,531	977	92,617
전체투자액	2,097,580	370,394	268,747	111,398	17,436	2,865,557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SIA, *SIA Newsletter*, June 2003.

4. 한·인도 경제관계

가. 교역

□ 교역비중

- 인도는 한국의 13대 수출국이자 27대 수입국(2003년 7월말 기준)
- 한국은 인도의 19대 수출국이자 10대 수입국(2002년 기준)

□ 연도별 수출입 추이(2003. 7)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무역수지	328	201	214	1,062	594	341	302	135	807
수출	1,126 (-2.9)	1,177 (4.5)	1,150 (-2.3)	1,668 (45.0)	1,362 (-18.3)	1,326 (-2.7)	1,407 (6.2)	1,384 (-1.7)	1,555 (113)
수입	798 (36.6)	976 (22.2)	936 (-4.1)	606 (-35.4)	768 (26.6)	985 (28.2)	1,106 (12.3)	1,249 (13)	748 (-2.0)

주: ()는 증감률. 2003년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인도 업종별 수출입 내역(2003. 7)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전자·전기제품	452 (52.0)	420 (-7.0)	575 (196.9)	광산물	359 (67.3)	422 (17.7)	257 (4.6)
기계류	398 (35.6)	392 (-1.4)	560 (166)	섬유류	237 (-13.4)	260 (10.1)	155 (4.0)
화학공업제품	171 (-24.9)	191 (11.4)	149 (35.1)	농림수산물	190 (34.8)	220 (15.8)	122 (-29.9)
철강·금속제품	141 (-6.7)	150 (6.0)	112 (36.0)	화학공업생산물	136 (-13.3)	161 (18.9)	90 (0.9)
섬유류	150 (-5.6)	130 (-13.3)	79 (4.5)	철강·금속제품	87 (1.6)	73 (-16.7)	66 (78.3)
광산물	48 (-64.5)	51 (5.9)	44 (47.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1 (56.2)	35 (14.9)	18 (-13.6)
총계	1,408 (6.2)	1,384 (-1.7)	1,555 (113.0)	총계	1,106 (12.3)	1,249 (13.0)	748 (-1.9)

주: 품목분류는 MTI 1단위 기준.

()는 증감률. 2003년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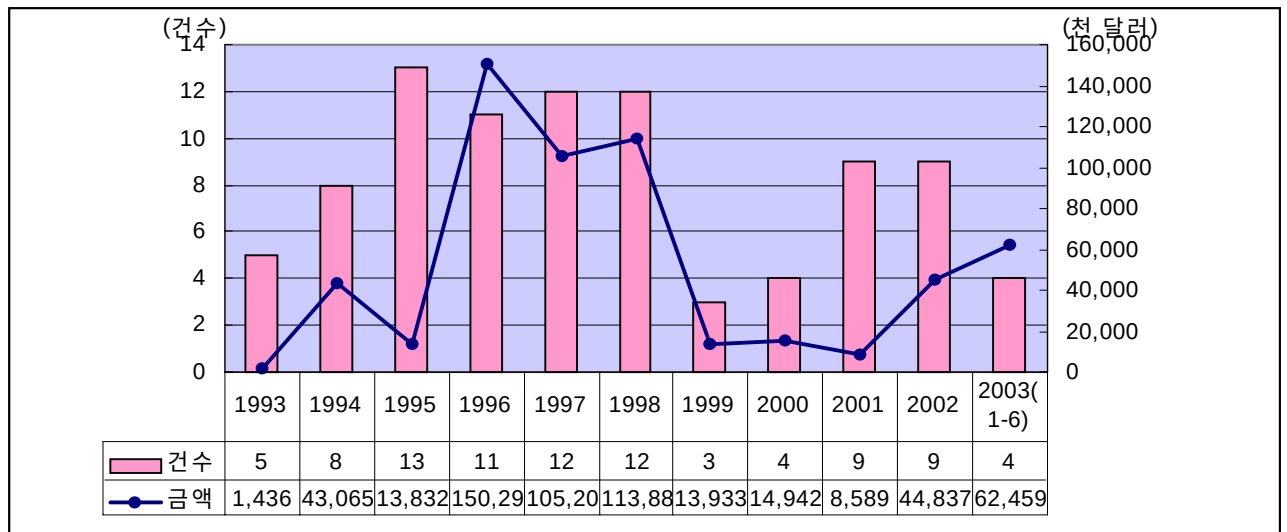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투자비중(2002년)

- 인도는 한국의 15대 해외투자국
- 한국은 인도의 5대 외국인직접투자국

□ 연도별 대인도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2002년 말 기준 누적치)

(단위: 건, 천 달러)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합 계
건 수	2	1	84	4	7	2	8	105
금 액	1,043	43,088	615,473	890	95,606	57	13,941	775,09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의 對한국 직접투자추이(신고수리 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	누계
건 수(건)	4	3	11	13	20	16	6	92
금액(천 달러)	267	139	815	702	857	767	252	5,852

주: 누계는 196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수치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KOTRA 외국인투자진흥센터(T: 3460-7574)

Ⅲ. 경제현안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인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3,287,590 km²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와 10억 5,000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나, 2002/03 회계연도¹⁾ GDP는 5,076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약 1.7%(한국 경제의 1.1배 규모)에 불과함.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6%대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

□ 2003년 인도 경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6% 성장대 재진입은 어려울 것이나 농작물 작황의 호조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 증대에 힘입어 5.6%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생산의 호조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수가 회복되는 동시에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의 증대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인도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인도는 대외교역에서 2003년과 2004년 각각 GDP의 0.4%, 0.6%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T 및 IT 응용 서비스산업을 필두로 인도 GDP의 5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의 수출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 또한 전 인구의 70%가 종사하면서 인도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농

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2001/02 회계연도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임.

업생산 또한 온화한 문순의 영향으로 작황호조를 보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인도의 경제발전 과제

□ 1991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정부의 다양한 경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WTO 의무사항 이행조건인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개방하는 한편, 통신부문 구조조정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인도국가개발위원회는 2002년 12월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2-2007년)」 기간 동안 8%의 경제성장 목표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정부문 개혁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자립경제추구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 개발전략의 잔재는 경제개혁의 추진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정치권, 노동조합 등의 집단이기주의와 공무원의 관료주의는 경제개혁과정에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을 비롯, 인도의 물가나 국제수지등은 안정적이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음.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총 재정적자는 GDP대비 10~12%대에서 2003/04년에는 13~14%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인플레이션 유발→경상적자 증대→루피화 가치의 폭락→외자유출 급증으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재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부진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마련은 물론 FDI를 통한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

- 이에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에선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된다는 인식하에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제개발의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간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FDI유치에 필요한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부진한 해외직접투자 등도 인도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WTO 뉴라운드(2001. 11, 카타르 도하)의 출범으로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무역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WTO를 통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국시장의 개방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최근 인도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내용

□ 2003/2004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인도정부는 2003/200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2002. 2.28)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 5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내수요 진작,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및 수출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보건·주택·교육·고용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 인프라 개발
 -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공고화

○ 농업 및 관개

○ 수출증대를 포함한 제조업 효율성 증대

□ 인도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금조달원으로 FDI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FDI 유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FDI의 부진은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간의 오랜 영토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정부의 미진한 경제개혁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의 요인이 큼.

- 이에 인도정부는 2002년 FDI 증대를 위한 특별정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파키스탄 정부와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향후 對인도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의 완전개방을 위시하여, ▲통신업, 금융업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의 매입가능 지분의 점진적 확대, ▲해외투자 투자대상 및 액수 확대에 의한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장려를 위한 Tax holiday 부여 등 외국기업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와 허가된 투자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집행기구(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 FIIA)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음.

- 2003/04 예산안에서 은행에 대한 FDI 한도를 49%에서 74%로 인상키로 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 적극적인 개방적 대외경제협력의 추진

- 인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양자간 경제협력 등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지난 1985년 남아시아 7개 회원국으로 발족한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은 출범 10년만인 1995년 '남아시아特惠무역협정(SAPTA)'을 발효하고 오는 2001년까지 회원국간特惠관세를 부여하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를 조기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였음.

○ 이후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인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이 재현되면서 SAFTA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인도는 1998년 12월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네팔, 부탄을 포함한 3개국과 각기 독립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 역내국과의 경제협력 외에도 인도는 ASEAN을 위시한 아시아 여타의 국가들과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관계의 구축 및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전격 합의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도와 ASEAN 주요국(싱가포르, 태국)과 쌍무적인 FTA 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금년 2월 5일에는 아드바니 인도 부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인도-싱가포르 FTA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 2004년까지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고 그 밖에 양국 관심사항인 IT, 관광, 생명공학 등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했음.

- 또한 인도 바즈파이 총리는 2003년 6월 22~28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양국 최초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음.

○ 동 방문시 국경간 교역과 투자(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를 장려하고 양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것과 방콕협정²⁾ 하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결정하였음.

- 現 對중국 수출 품목의 30%에 해당하는 700개 항목으로 양허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하였는바, 동 조치가 실행될 경우 주요 對중국 수출품인 화학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 섬유, 다이아몬드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상호 호혜적인 방콕협정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양국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한·인도 경제현안

가. 한·인도 경협 개요

- 한·인도 양국은 지난 73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확대·심화하여 왔으며, 특히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가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 양국간 교역과 투자 규모는 1991년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교역규모는 매년 2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2003년 1월~7월간 對인도 수출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등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KOTIS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1월~5월중 4.4%를 기록하여 3.4%를 점하고 있는 일본을 제치고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한·인도 교역은 특정 상품에 대한 편중도가 크며, 교역구조도 양국 경제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방콕협정은 1975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2001년 4월 가입) 등 6개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혜 무역협정이다. 2001년 4월에 개최된 제 57차 ESCAP 총회에서 중국의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방콕협정은 회원국 인구수가 25억을 초과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배경으로 탄생한 지역무역협정으로서 동 협정을 통한 교역확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액은 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인도의 해외 투자국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1월말 누적기준 투자건수 및 금액(실행기준)은 각각 103건, 7억 2,249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투자진출이 시작된 1994년 이후 86건, 7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 내 임금상승과 한국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등에 따라 인도로의 직접투자는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등 저임노동력 활용차원의 원가절감형 투자와 선진국의 쿼터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기지 확보 차원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음.
- 1990년대부터는 인도의 시장잠재력이 부상하면서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인도 진출이 이루어졌음.
 -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제고와 특히 對중국 투자가 문제점을 노출, 한국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건수 및 금액면에서 그동안 누적치를 상회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음.
- 그러나 1998년 인도정부의 핵실험 강행 이후 인도 정국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도의 공기업 우대정책, 공사입찰시 복보증 요구, 사업승인 지연, 상용비자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아 1999년 이후의 對인도 투자는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나. 주요 통상현안

1) 관세인하 및 복잡한 관세체제 시정

-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제적·폐쇄적 요소의 잔존, 인프라스트

력처의 미비 등이 한국의 對인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한국이 對인도 교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로는 타지역에 비해 높은 관세장벽, 소비재 완제품의 수입금지, 복잡한 수입절차, 부가관세와 같은 추가관세 부과 등 교역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임.

2)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

□ 인도정부가 수입개방과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대응방안으로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보수적인 성향의 현정부는 지난 1998년 3월 출범 이후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전면적인 수입물량제한철폐에 따른 수입품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지난 1992년 반덤핑제도의 시행 이후 8년간 13개 한국산 수입품목(모두 섬유·화학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였는 바, 이는 총 50여 건의 반덤핑 사례 중 23.6%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서 對한국 수입규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합성수지(NBR), 아크릴단섬유, 폴리스티렌수지, 알콜, 광섬유, 합성고무(EPDM), 페놀, 아세톤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를 진행중임.
 - PET필름, 합성고무(SBR)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20%내외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 이로써 2002년 기준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국별 수입규제 건수에서 인도

는 21건인 미국 다음으로 높은 18건의 수입규제 건수를 기록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음.

3)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철폐 및 완화

□ 공기업 우대정책, 공사입찰시 복보증 요구, 사업승인 지연, 상용비자 취득의 어려움 등 한국기업들이 인도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공기업 우대정책

○ 인도는 1992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 프로젝트에 대하여 인도 공기업(Public Sector Enterprise)에게 10% Purchase Price Preference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동 제도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임.

- 공사입찰시 복보증 요구

○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한국의 은행이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인도 내 은행의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추가 금융부담 및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은행이 발행한 모든 보증서에 대하여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최소한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에 대해서는 인도 내에서도 인정토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승인절차의 간소화

○ RBI(인도중앙은행)로부터 투자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

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에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도 별도 승인 허가 필요

- 사업퇴출정책(Exit Policy)의 탄력적 운용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업체의 경우 제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인도내 장기 근무자들이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거주자등록사무소(FERO)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며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비자를 연장해야 하여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4) 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한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

□ 최근 인도의 IT 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풍부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동통신과 반도체 등 일부 하드웨어 부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음.

-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이면서도 IT부문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미국에 이어 세계 2위), IT산업 발전가능성은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인도는 하드웨어 산업이 매우 취약하고 동시에 하드웨어 완제품 및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수준도 낮아 현지 합작생산이나 기술도입을 선호함.

- 따라서 한국의 IT기업들은 한국산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의 기술협

력의 방식으로 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제3국 수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IT산업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IT협력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양국간의 IT산업의 교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인도와 협력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선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임.

- 지난 2000년 3월 클린턴 미대통령은 인도 방문시 대규모 경제협력단을 동행, 인도 IT 산업을 중심으로 미-인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음.
- 일본정부는 2000년 8월 모리 총리의 인도방문을 계기로 일-인도간 IT 분야의 교류확대를 위해 IT Summit를 개최하고 인도 IT기술자의 일본 연수(3년간 1,000명)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IT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 한국도 앞선 하드웨어 기술과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결합하는 한-인도간 공동사업 추진, 인도에 연구소 및 Back office 설치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 개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바, 동 분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음.

-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및 아시아지역의 대규모 플랜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는 한국 기업들은 건설·플랜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5) 기타

- 방콕협정 대상품목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 추진,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항공협력 강화, 한·인도 해운협정 체결, 한·인도 세관협정 체결 등도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임.

- 양국간의 거리를 좁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